

총장 선출제 구성원 의견 - ②

“목적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무방”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 구성원 사이에서 빚어진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평의 규정안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과 아울러 “범 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미상의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총장후보선출 제도에 관한 구성원의 시각차를 살펴보려 한다. 지난 신문에서 강재식 교수의장, 한상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양 캠퍼스 학생 대표자, 손기경 민주노총 경희의료원 지부장의 시각을 담았다. 이번 신문에서는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의 시각을 담았다.

아울러 총장 선출제 이슈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를 지칭할 때 엄밀하게 따진다면 ‘총장 후보자 추천 제도’가 맞는 표현이나, ‘총장을 뽑는 과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당초 논의 취지와 다년간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라는 표현을 널리 써왔다는 맥락에 비추어 우리신문은 ‘총장 선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독자들께 알린다.

“총장 선임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대학평의원회(대평)’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해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박 대행은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대상이 어떤 협의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현재 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 논의 결과를 들어 법과 규정, 그리고 2018학년도 제4차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가 논의한 바는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구성원 대표 사이에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이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성원 대표는 11개 구성원 단체 중 과반인 서명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합의서를 법인에 제안했지만, 이사회 당일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과 대학본부가 현 구성원 논란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정치적 상황으로 번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 중 모든 구성원 단체가 대학의 개입 불가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논란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 총장후보자 추천규정(추천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24일까지 법인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었다.

앞서 구성원들은 지난 3월 법인이 마련한 추천규정 초안을 두고 “선출규정이 아닌 추천규정을 내놓고 그 안에 여려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행은 “총장 선임 관련 규정 입안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법인의 역할이며, 규정 입안 전 구성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

라 구성원 소통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장 후보 3인을 이사회 추천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총장 선출 제도’가 아닌 ‘총장 후보자 추천 제도’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총장 선임은 어디까지나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러한 권한에 근거해 법인은 총장후보자 추천 기능 일부만 총장후보자위원회(총주위)에 위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 선임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 본질이 다르다”며 “총주위는 법인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법과 규정에서 부여된 대평의의 역할 중 총

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모든 구성원이 염원하는 훌륭한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천규정에서 독소 조항 중 하나로 지목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총장 임용은 법으로 보장된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그에 부수되는 절차가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에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을 위해 선거운동 같은 방식보다는 총주위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신념과 정책이 공정하게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활동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장 선출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이 다양화, 다각화되며 향방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박 대행은 “법인 이사회는 이번 학기 내 새로운 총장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추천규정에 대해 구성원 간 입장차가 있으며 조속한 총장 선임을 위해선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학이 중재나 개입이라는 방식으로 구성원 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해 “지금 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와 합의, 그리고 이해를 통해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장상 관련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바람직한 총장상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총동문회, 기존 투표반영 비율 지지”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제5차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서 제기된 동문 대표들의 주장과 ‘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에 대한 투표는 총동문회 입장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들의 독단이었다.” 제29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권오형(경영학 1965) 회장은 지난 24일 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총동문회의 속내를 털어놨다.

‘대평의 선출규정’이 투표로 확정됐던 지난 제5차 대평의에서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제안하고 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은 “총동문회가 ‘대평의 선출규정’ 투표에 대한 캐스팅보트인 상황 속에서 동문 대표들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거나 ‘대학은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규탄했다.

총동문회는 범대위 존중한다

총동문회는 지난 7일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변경에 관한 투표 이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총동문회는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수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이미 3년 전 김홍두 의장 시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비율을 바꾸자



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대평의 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참석자를 재임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동문회의 입장은 각 구성단체 임원진의 교체로 상호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임 총장 선출을 원료하는 것”이라며 “각 구성원 단체가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되며 범대위가 다시 나서서 총장선출규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 전임 회장이 제5차 대평의에 참여할 동문 대표를 임명하고 떠났다”며 “절

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참석자를 재임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동문회의 기본 방침은 어디까지나 범대위에서 합의했던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지지하는 것이다”며 “앞서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평의에서 의견 개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동문 대표들이 독단적으로 높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가 다시 나서야 할 때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인 5월 20일을 훌쩍 넘기고도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권 회장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조율만 거치면 구성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수의회가 구성원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범대위를 구성해 논의를 꾸려왔던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이 임기 등의 문제로 하차하지만 않았더라면 총장 선출은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새로운 총장 선출제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유능하고 탁월한 총장을 모시기 위함이지, 각자의 이익과 권력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의회의 행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과 공청회 도입해야

총장 선출제를 두고 권 회장은 선거운동과 공청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공약과 비전을 밝히고 구성원들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유능한 총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물며 자식도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은 이러한 후보자 공론화 과정을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비즈니스 마인드와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갖춘 새 총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총장의 역할을 통해 불요불급한 조작을 개편하고 재정 상태를 확대·재생산 구조로 펴바꿈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